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 · 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해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성일자리를 위한 정부 대응¹⁾

- 4차 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일자리의 디지털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하 IT기술)이 기반이 된 직종의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했다. 기존에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이하 STEM) 분야에서 공부하거나 IT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도 여성들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 영국에서 IT 분야의 여성 비율은 2021년 기준 27%이며, 이는 예년에 비해 2%만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해당 분야의 고위직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5%밖에 안 되며, STEM 분야의 학생 여성 비율은 2019년 기준 22%밖에 안 된다. 영국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보건 의료, 유통, 행정업무 분야에서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 일자리는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로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의 디지털 전환기에 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영국 정부의 주요 과제이다.
- 영국 정부는 4차 혁명 시대에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IT 기술/인공지능 분야와 일자리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여성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미래인재 교육, 기존인력 복직지원, 그리고 여성의 STEM 분야 종사에 대한 인식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① 영국 정부가 2019년에 발표한 여학생 컴퓨터공학 교육인 ‘컴퓨터 공학에서의 젠더 균형’(Gender Balance in Computing)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고용시장에 진입할 여학생들의 기술산업 역량강화 교육정책, ② STEM 분야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복직을 위해 여성부에서 2022년 세계 여성의 날에 발표한 ‘새로운 STEM 복직자 이니셔티브’(New STEM ‘Returners’ Initiative), ③ 정부 부처에서 여성의 STEM 분야 종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여학생 컴퓨터공학 교육 프로그램

- 영국정부는 오랜 시간 학업과 노동시장의 STEM 분야에서 성별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고 꼽는다. 그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여학생들에게 컴퓨터 공학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식개선을 통해 IT 및 인공지능 분야의 여성들 진출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한다. 영국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5~16세 여학생들이 컴퓨터공학(Computing Science)에 대한 관심과 필요한 역량을 교육받을 수 있는 ‘컴퓨터 공학에서의 젠더 균형’(Gender Balance in Computing)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24만 파운드(약 38억 원)를 지원한다고 최근에 발표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수요조사 연구 및 시범사업을 전국 550개 학교 1만 5천 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본 연구 및 프로그램은 영국에 있는 여러 IT와 STEM 관련 재단 및 연구소와 협업하여 진행한다.
- 본 프로그램은 크게 다섯 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수업 접근법(Teaching Approach)은 컴퓨터 공학에 대한 여학생들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또래 교육, 멘토링 수업,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수업에 적용한다. 둘째, 소속감(Belonging)은 여학생들이 컴퓨터공학 분야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롤모델과 만남, 그리고 가족과의 상담을 진행한다. 셋째, 비형식적 배움(Informal Learning)은 여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활동과 컴퓨터공학 분야에서의 직업 기회를 연결하여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도와준다. 넷째, 관련성(Relevance)은 교사들이 컴퓨터 공학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교육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과목 선택과 선택지 자료(Subject Choice and Options Materials)는 여학생들이 컴퓨터 공학 과목을 선택하고 관련한 여러 선택지를 고려하면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장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해당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의 기초를 다진다.
- ‘컴퓨터 공학에서의 젠더 균형’(Gender Balance in Computing) 시범사업은 이 2022년 말에 마무리된다. 3년 간의 연구 및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여학생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영국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소 25년을 내다보고 투자하고자 한다. 향후 본 사업과 같이 여학생을 대상으로 STEM, IT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교육 및 연구사업이 성별 격차 해소를 효과적으로 연결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기존 4차 산업 종사 여성을 위한 복직지원 프로그램

- 202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영국 여성부 장관(Minister for Women)은 여성들의 고용 기회를 증진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그중 하나는 ‘새로운 복직자 프로그램’(New ‘Returners’ Programme)이다. 여성부 장관(Minister for Women)은 STEM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육아휴직 이후 안정적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 정부는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하여 25개의 STEM 분야 여성복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이번 ‘새로운 복직자 프로그램’(New ‘Returners’ Programme)이 설계될 것이다.

- 여성부 장관(Minister for Women)은 여성들이 영국에서 여성들이 무임금 가사 노동과 육아에 압도적으로 치중하는 점이 해소되지 않았고, 특히 팬데믹 이후 여성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진 점을 향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STEM 분야의 여성 중 61%가 복직을 어렵하다고 2021년 STEM 복직자 조사(2021 STEM returners index survey)이 발표한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복직자 프로그램’(New ‘Returners’ Programme) 시행 배경을 설명한다. 본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인식개선을 강조하고, STEM 분야에 복직하려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기업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다. 최소 2년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더 많은 기관과 기업에서 본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여러 기관에서의 시행 여부를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여성의 4차 산업분야 종사 인식개선 캠페인

- 고용 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여성들이 4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지나 데이비스 센터와 미디어 연구소(Geena Davis Institute on Gender and Media)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에서의 STEM 분야 종사자는 61%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위의 결과가 실제 영국에서 STEM 종사자가 남성으로 대표되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발표했다. 관련하여, 영국 고용 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여성들의 활발한 STEM 분야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목소리(Digital Voices)와 디지털 고용 캠페인(Digital Recruitment Campaign)과 같이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디지털 목소리(Digital Voices)는 디지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역량 강화 기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본 플랫폼은 매년 STEM 분야에 대한 여성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선정한다. 여성들의 자신감 고취와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4년째 운영 중이다. 또한, 디지털 고용 캠페인(Digital Recruitment Campaign)을 통해 여성들의 STEM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남성에 치중한 해당 분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용 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는 STEM 분야 여성 대표를 초대하여 직업박람회를 열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분야 여성 리더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인식개선 플랫폼과 캠페인이 영국에서 점차 확장되는 추세이지만, 실제 인식개선과 여성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Open Access Government(2022.03.08.), "Making way for more women in digital transformation", url: <https://www.openaccessgovernment.org/women-in-digital-transformation/131062/> (접속일: 2022.03.17.).
- Evening Standard.(2019.04.30.), "UK government announces £2.4 million investment to encourage more girls into computing", url: <https://www.standard.co.uk/tech/uk-government-2-4-million-gender-balance-in-computing-a4129976.html> (접속일: 2022.03.17.)
- Siân Herbert(K4D)(2017.11.30.), "Digital development and the digital gender gap", url: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5f228f40f0b652634c6f4a/249-Digital-development-and-the-digital-gender-gap.pdf> (접속일: 2022.03.17.).
- MOJ.GOV.UK (2021.01.18.), "Women in Technology", <https://mojdigital.blog.gov.uk/2021/01/18/women-in-technology/> (접속일: 2022.03.17.).
- DWP.GOV.UK (2021.10.11.), "Our pledge to redress the gender balance", url: <https://dwpdigital.blog.gov.uk/2021/10/11/our-pledge-to-redress-the-gender-balance/> (접속일: 2022.03.18.)
- Workingmums. "Government should ensure women have digital skills they need", url: <https://www.workingmums.co.uk/government-should-ensure-women-have-digital-skills-they-need/> (접속일: 2022.03.18.)
- ITPro(2022.02.22.), "Tech roles held by women increased by just 2% in 2021", <https://www.itpro.co.uk/business-strategy/careers-training/362710/tech-roles-held-by-women-increased-2-in-2021#:~:text=The%20number%20of%20women%20in,2020%20to%2027%25%20in%202021> (접속일: 2022.03.20.)
- Geena Davis Institute on Gender and Media.(2021), "Closing the STEM Gender Gap", url: <https://seejane.org/wp-content/uploads/closing-the-stem-gender-gap-uk-report.pdf> (접속일: 2022.03.20.).
- Computer Weekly.(2021.10.22.), "Women more likely to have retrained for tech roles than men", url: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252508548/Women-more-likely-to-have-retrained-for-tech-roles-than-men> (접속일: 2022.03.20.).
- Tech Computing. <https://teachcomputing.org/gender-balance> (접속일: 2022.03.23.)
- DWP.GOV.UK.(2021.03.08.), "Celebrating our Digital Voices on International Women's Day". url: <https://dwpdigital.blog.gov.uk/2021/03/08/celebrating-our-digital-voices-on-international-womens-day/> (접속일: 2022.03.22.)
- Manchester Digital.(2021), "DWP Digital to host a Virtual Recruitment Evening this month", url: <https://www.manchesterdigital.com/post/dwp-digital/dwp-digital-to-host-a-virtual-recruitment-evening-this-month-1> (접속일: 2022.03.22.)

영국, 여성 청소년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

- 영국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무료월경제품계획(Free Period Product Scheme, 이하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을 시행했다. 인력위생서비스기관(Personnel Hygiene Services)이 실시한 월경 형평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35%의 여성 청소년이 월경 문제로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들의 대부분은 재정 부족으로 월경 제품을 구입하지 못해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2차 성징 과정에서 여성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월경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고, 월경을 둘러싼 낙인을 줄이기 위해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을 시행하였다.
-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은 영국의 공립학교와 교육과 기술 후원기관(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 ESFA)의 후원을 받는 16~19세의 청소년 교육기관(16 to 19

institutions)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현재까지 13,822개의 기관이 월경제품을 무료지급 받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중등 교육기관에서 초등 교육기관까지 해당 정책을 확대하여 초등 교육기관의 61%가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본 정책은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월경제품의 보편적인 제공이 아닌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정책 시행 이후, 월경제품의 주문량은 2020년에 비해 2021년 23% 증가하였고, 친환경 제품과 재사용 제품의 구매율은 48% 증가하였다. 최근 영국정부는 본 정책을 2022년 7월까지 연장할 것을 발표하였고,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론에서는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의 자격조건과 공급체계

- 월경제품 무료지급 정책은 예상치 못하게 월경을 시작했거나, 월경제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제품을 챙겨오지 못한 모든 여성, 논바이너리(non-binary), 그리고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수혜대상이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필요에 따라 월경제품을 무료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9세 이상의 경우, 16~18세에 시작한 교육을 수료하지 않았고, 교육건강보육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 EHCP)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교육기관은 월경제품을 전체 여학생의 약 35%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까지 주문할 수 있고, 향후에 주문량을 조절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월경제품은 일반 월경대, 친환경 재사용 월경대, 면 월경대, 탐폰, 그리고 월경 캡으로 해당 기관의 여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기관들이 연 2회 월경제품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문 후 5일 이내에 무료로 배송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에 무료지급 하는 월경제품의 재고관리, 배송, 그리고 기관관리 서비스는 인력위생 서비스 기관(Personnel Hygiene Service, 이하 PHS)에서 담당한다.
 - 교육부는 교육기관에서 월경제품이 필요한 학생들이 수치심 들지 않게 배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교육기관 화장실에 비치하는 것에 더하여, 도서관이나 학생서비스 공간에 비치하여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두 번째로는, 월경제품이 필요할 때 학생대표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제품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접근장벽이 높고, 오히려 또래 학생인 학생대표에게 문의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권고이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구역에서 쿠폰으로 월경제품을 자판기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월경제품의 관리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지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도 사용하는 공간에서 제품을 배급받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월경 경험자들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위의 방식 외에도,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치심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필요할 때 월경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 ■ 월경에 대한 낙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
-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교육부는 영국에서 아직도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월경을 둘러싼 낙인과 금기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정책을 통해 이러한 낙인과 금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발표했다.

• 참고문헌 •

- GOV.UK (2022.1.27.) "94% of secondary schools provide free period products to students" <https://www.gov.uk/government/news/94-of-secondary-schools-provide-free-period-products-to-students#:~:text=In%20total%2C%2013%2C822%20individual%20organisations,90%25%20of%20post%2016%20organisations.> (접속일: 2022.4.17.).
- GOV.UK. (2021.11.21.) "Period product scheme for schools and colleges in England"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eriod-products-in-schools-and-colleges/period-product-scheme-for-schools-and-colleges-in-england> (접속일: 2022.4.17.).
- GOV.UK. (2022.1.27.) "How the Period Products Scheme is removing barriers in education" <https://educationhub.blog.gov.uk/2022/01/27/how-the-period-products-scheme-is-removing-barriers-in-education/> (접속일: 2022.4.18.).
- GOV.UK (2021.11.26.) "Free period product scheme for schools and colleges extended" <https://www.gov.uk/government/news/free-period-product-scheme-for-schools-and-colleges-extended> (접속일: 2022.4.18.).
- PHS (2021) "PHS group period equality whitepaper" https://www.phs.co.uk/media/2907/96671-phs-group-period-equality-whitepaper_uk-v3.pdf (접속일: 2022.04.18.).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여성 관련 정책의제²⁾

- 프랑스에서는 2022년 4월 10일,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재임 중인 에마뉼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과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대표인 마린 르펜(Marine Le Pen) 후보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4월 24일에는 두 후보의 결선투표가 실시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프랑스에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가 제시하는 여성,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제나 공약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 개괄해 보고자 한다.
- 우선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년 임기 동안 양성평등을 우선 정책의제 중 하나로 추진했고, 여러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여성 피임약 무료 처방 대상 확대(2020년 15세 이하에서 2022년 25세 이하로 변경), 합법으로 인정하는 임신중지 기간 연장(12주에서 14주로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폭넓은 여성정책들을 추진했다. 또한 폭력을 행사한 바 있는 가해자가 피해 여성으로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24시간 핫라인 개통 및 운영 등도 성과로 볼 수 있다.
- 2022년 3월, 대통령 1차 투표를 앞두고 프랑스의 세 시민단체인 Oxfam France, Equipop, Care France는 지난 5년 간의 양성평등 정책 변화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목표는 원대했지만 결과는 미미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예를 들어 양성평등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은 국가 전체 예산의 0.25% 수준에

2) 박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교(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지나지 않았으며(2022년 기준), 여전히 3일마다 1명 꼴로 프랑스 여성들이 현 또는 전 배우자에게 살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프랑스 여성단체들은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구조적, 제도적 변화와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프랑스 여성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여성 살해(femicide), 이슬람 여성에 대한 혐오, 남녀임금격차,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 문제 등 현 프랑스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22년 2월에는 프랑스의 여성단체 대표 또는 단체 내 고위관계자 7명이 주간지 르주르날 드 디망쉬(Le Journal du Dimanche)를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10가지 의제에 대한 공동서명을 발표한 바 있다.
- 르펜 후보는 스스로 여성주의자(feminist)라고 칭한 반면, 정치적으로 극우 성향과 결합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르펜 후보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프랑스 여성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발표하였는데, 본 발표문에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이민자들을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추방하겠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었다.
- 프랑스의 여성단체 ‘Osez le féminisme’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발언 등이 얼마나 여성의 권익을 고려하고 옹호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성주의적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파비엔 엘 쿠리(Fabienne El-Khoury) 대변인은 단체의 정치적 성향은 없고 한 정당에 치우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르펜 후보 측이 제시하는 공약 프로그램은 여성 대상 폭력 철폐나 남녀임금 불평등 문제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담고 있지 않다. 르펜 후보는 인종차별적(racist) 관점에서 외국인들을 공격해야 할 때만 여성 권리를 언급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르펜 후보 측이 만든 정책 공약집에서 여성 관련 정책은 전혀 없으며, 가족 정책 분야에서 출산 및 육아 관련 부분에 걸쳐 2번 정도 여성이 언급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 파리 근교 한 도시에서 폭력 피해여성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단체인 ‘Maison des Femmes’ 설립자이자 산부인과 전문의인 가다 아템 강처(Ghada Hatem-Gantzer)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여성들 중에는 외국인 이민자 여성들도 있는데, 르펜이 당선 되면 외국인들의 의료 접근성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면서 “르펜에게 한 표 던지는 게 여성을 위한 투표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 위에서 소개한 10대 제안서에 서명하기도 한 여성단체 중 하나인 ‘Fondation des Femmes’의 안-세실 멜페르(Anne-Cecile Mailfert) 대표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르펜 후보의 여성, 양성평등 관련 인식과 정책방향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녀는 “대통령 후보가 여성이라고 해서 꼭 여성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다. 르펜 후보는 극우 노선에 서 있는 후보일 뿐이며, 대개 극우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여성의 권리는 후퇴한다. 그녀가 스스로 본인과 결을 같이 한다고 언급하는 헝가리 총리, 브라질 대통령 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다른 여성단체 대표 역시

지적인 부분이다.

- 여느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대통령 결선투표 결과는 여성 및 양성평등 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어떤 여성 관련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여성 대상 폭력 해결과 같은 현안이나 후보 측이 내세운 여성 관련 공약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문헌 •

- CNN (2022.04.07.), "The quest for égalité: What's at stake for women in the French election", <https://edition.cnn.com/2022/04/07/europe/macron-french-presidential-election-gender-equality-as-equals-intl-cmd/index.html> (접속일: 2022.04.23.).
- FigaroVox (2022.03.07.), "Marine Le Pen: Lettre aux Françaises", <https://www.lefigaro.fr/vox/politique/marine-le-pen-lettre-aux-francaises-20220307> (접속일: 2022.04.23.).
- France 24 (2022.03.30.), "Five years of Macron: A gap between words and action on presidential priorities", <https://www.france24.com/en/france/20220330-five-years-of-macron-the-gap-between-words-and-action-on-president-s-priority-issues-part-4-of-4> (접속일: 2022.04.23.).
- Le Journal du Dimanche (2022.02.05.), "Tribune: Candidats, engagez-vous sur les 10 mesures de notre plan d'urgence pour l'égalité femmes-hommes", <https://www.lejdd.fr/Societe/tribune-candidats-engagez-vous-sur-les-10-mesures-de-notre-plan-durgence-pour-egalite-femmes-hommes-4092062> (접속일: 2022.04.23.).
- Oxfam France (2022.03.07.) "Egalité femmes-hommes : grande cause, petit bilan", <https://www.oxfamfrance.org/rapports/egalite-femmes-hommes-grande-cause-petit-bilan/> (접속일: 2022.04.23.).

미국 내 남녀임금격차 줄어드나³⁾

- 최근 미국의 민간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대도시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들의 임금을 뛰어넘고 있다고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250개의 대도시 중 뉴욕(New York),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를 포함한 22개의 대도시에서 일하는 서른 살 이하의 여성의 임금이 남성 상대방에 비해 더 높다. 하지만 이 결과로 미국 내 대부분의 여성의 임금이 높다거나 최근 남녀 임금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선부르다. 이 결과는 250개 대도시 중 22개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 미국 내 대부분의 상근직 직장인 여성은 여전히 83센트(cents) 대 1달러(dollar) 비율로 남성에 비해 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NPR, 2022). 또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남녀의 불평등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벌리는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직장인의 남녀임금격차는 최근 몇 년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의 노동시장의 참여 정도가 남성에 비해 코로나19

3) 김춘례 세인트조셉 대학교 (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를 겪으며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며 직장을 잃은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특히 저학력 성인들의 경우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3/4분기 이후 모든 25세 이상 여성의 실업률이 1.3%였던 것과 비교해 남성은 1.1%였으며, 고등학교 학력 이하 여성의 경우 실업률이 12.3%던 것과 비교해 남성은 4.9%인 것으로 나타났다(Pew Research, 2022).

-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Joe Biden)은 2021년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맞아 진행된 행사의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 정의를 위해 싸웠고 장벽을 부숴냈으며, 경제를 일으키고 부흥시켰으며 위기의 순간에도 커뮤니티를 이끌어 갔고 존엄성과 결단력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여성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너무나 자주 그녀들의 노력이 할 자유와 참여권과 공평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라고 밝히며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상 행정명령을 내렸다(NPR, 2022).
- 그중 하나는 백악관(White House)에 젠더정책심의회(Gender Policy Council)를 설립한 것이다. ‘The White House Council on Women and Girls’라고 불리는 비슷한 심의회가 오바마 정부에도 존재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해체되었다. 바이든 정부는 성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심의회를 설립을 추진하면서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들도 보호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여성 심의회가 아닌 “젠더정책심의회”로 이름을 바꿔 설립할 것을 명하였다(NPR, 2021). 이번에 설립된 젠더정책심의회는 최초의 성 형평성과 평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낙태법부터 이민자 권리까지 40페이지가 넘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 젠더정책심의회가 설립된 이후 바이든 정부는 남녀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남녀평등을 이끄는 중요한 걸음이라 밝히며 여성의 노동시장을 확대하고 워킹맘을 포함한 워킹가족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정부 및 연방정부 계약직 채용 시 지원자의 급여 이력 및 정보를 묻지 않도록 규제하였다(The White House, 2022). 과거 급여 이력을 묻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연봉 책정 시 과거의 연봉을 기반하기보다는 경력 등 더욱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NPR (2022.4.2), “Young women earn more than young men in several U.S. cities”, <https://www.npr.org/2022/04/02/1090466033/gender-pay-gap-women-earn> (접속일: 2022.4.5).
- NPR (2021.3.2), “Biden Establishes A Gender Policy Council Within The White House”, <https://www.npr.org/2021/03/08/974655385/biden-will-establish-a-gender-policy-council-within-the-white-house> (접속일: 2022.4.5).
- NPR (2020.10.20) “Even The Most Successful Women Pay A Big Price”, <https://www.npr.org/2020/10/20/924566058/even-the-most-successful-women-are-sidelining-careers-for-family-in-pandemic> (접속일: 2022.4.8).
- Foreign Policy (2021.10.22) “Jennifer Klein on the U.S.’s ‘First Ever’ National Gender Strategy”, <https://foreignpolicy.com/2021/10/22/jennifer-klein-national-gender-strategy-policy-council-equity-equality/> (접속일: 2022.4.5).
- Pew Research Center (2022.1.14) “Some gender disparities widened in the U.S. workforce during the pandemic”,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2/01/14/some-gender-dispari>

- ties-widened-in-the-u-s-workforce-during-the-pandemic/ (접속일: 2022.4.6).
- The White House (2022.3.15) "FACT SHEET: Biden 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Commitments to Advance Pay Equity and Support Women's Economic Securit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3/15/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commitments-to-advance-pay-equity-and-support-womens-economic-security/> (접속일: 2022.4.8).
-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2022.3.4) "The COVID-19 Pandemic and Caregiver Discrimination Under Federal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s", <https://www.eeoc.gov/laws/guidance/covid-19-pandemic-and-caregiver-discrimination-under-federal-employment> (접속일: 2022.4.8).
- CNBC (2022.1.12) "How much do others make for the same job? Here's where employers are required by law to share salary ranges when hiring", <https://www.cnn.com/2022/01/12/states-and-cities-where-employers-must-share-salary-ranges-when-hiring.html> (접속일: 2022.4.11).
- CNBC (2020. 2. 11) "Data show pay transparency could be the No.1 solution to closing the gender pay gap", <https://www.cnn.com/2020/02/11/data-shows-pay-transparency-could-close-the-gender-pay-gap.html> (접속일: 2022.4.11).

미국 교육기관 내의 성차별 금지법

- 미국에서는 1972년 타이틀 9(Title IX)라는 연방법(이하 타이틀 9법)을 개정하여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였다. 타이틀 9법에 의하면 "미국 내 어느 누구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스포츠 등의 활동으로부터 성별(sex) 때문에 참여가 제외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혹은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 지방(Local) 및 주(State) 교육기관,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등의 다양한 기관에 적용된다.
- 현재 타이틀 9법의 보호 범위는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성을 기반으로 하는 괴롭힘, 임신부 학생 혹은 육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우, LGBTQI+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교육 기관들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타이틀 9법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성차별 금지 조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차별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혹은 연방 법원에 그 기관을 고소할 수 있으며 법을 어긴 기관의 경우 연방정부의 편당을 받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2).
- 최근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타이틀 9법에 대해 알고 있는 미국 남녀 성인 대부분(63%)은 이 법이 성평등(gender equality)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응답자의 37%는 여전히 해당 법이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여겼다. 특히 남성에게 비해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남성 46% vs. 여성 29%). 여성 선수의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남성 선수와 여성 선수가 같은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Pew Research Center, 2022). 아직 많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타이틀 9법이 성평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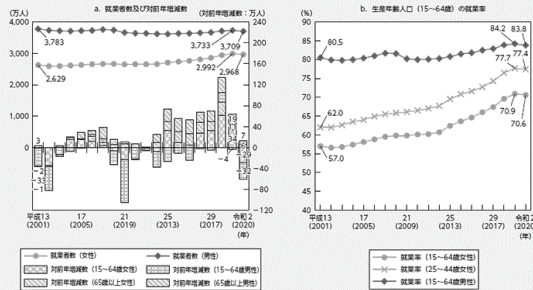
- CNN (2022.2.10.) "Harvard faces Title IX lawsuit after 3 students claim sexual harassment, abuse and retaliation by professor" <https://www.cnn.com/2022/02/10/us/harvard-title-ix-lawsuit/index.html> (접속일: 2022.5.6.).
- U.S. Department of Justice (2021.6.16.) "U.S. Department of Education Confirms Title IX Protects Students from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us-department-education-confirms-title-ix-protects-students-discrimination-based-sexual-orientation-and-gender-identity> (접속일: 2022.5.6.).

일본, 여성활약추진법(개정)의 의무 대상 확대⁴⁾

-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커리어에서의 활약을 목표로 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큰 허들이 존재한다. 또한 가까스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여성이 커리어에서 활약하며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은 실제로 여성이 관리직이나 고급인재로서 활약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와 관리직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현저한 차이를 보여, 직장 생활 내에서 여성의 활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2015년 여성활약추진법(女性活躍推進法)(정식명칭: 여성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 신설되었다. 이 법률은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남녀의 인권이 존중되고,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국민수요의 다양화 및 그 밖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풍요롭고 활력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해당 법률을 설명한 자료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일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젊은이나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인재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여성의 활약 추진을 통해서 다양한 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조사결과를 통해 여성의 활약 추진이라는 것은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일하기 쉽고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여성의 활약을 위한 정책이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러한 법이 운용되고 있다는 근거자료로 주목할 만하다.
- 해당 법률은 1) 여성에 대한 채용, 교육훈련, 승진, 직종 및 고용 형태의 변경, 그밖에 기회의 적극적인 제공과 활용을 통하여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가족을 구성하는 남녀가 성별을 불문하고 상호 협력과 사회의 지원 하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원활히 하면서 직업생활에서의 활약을 하는 데에 필요한 환경을 정

4) 전여주 동경대학교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박사과정

I-2-1 図 就業者数及び就業率の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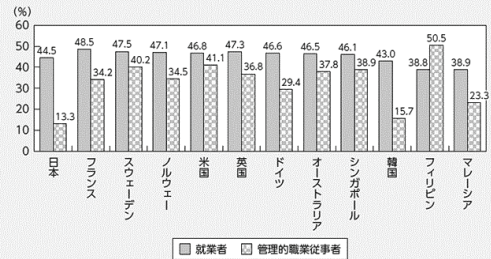


(備考) 1. 総務省「労働力調査(基本集計)」より作成。
2. 平成17年から28年までの値は、時系列推定値を用いている(比率を除く)。
3. 就業者数及び就業率の平成23年度は、総務省が推定値に推計した値。

출처: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内각부 남녀 공동 참획국),
〈男女共同参画白書 令和3年版〉

[그림 1] 취업자 수 및 취업률의 추이

I-2-14 図 就業者及び管理的職業従事者に占める女性の割合(国際比較)



(備考) 1. 総務省「労働力調査(基本集計)」(令和2年), その他の国はILO「ILOSTAT」より作成。
2. 日本, 米国, 韓国は令和2(2020)年, オーストラリアは平成30(2018)年, その他の国は令和元(2019)年の値。
3. 総務省「労働力調査」では、「管理的職業従事者」とは、就業者のうち、会社役員、企業の部長相当職以上、管理的公務員等。また、「管理的職業従事者」の定義は国によって異なる。

출처: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内각부 남녀 공동 참획국),
〈男女共同参画白書 令和3年版〉

[그림 2] 취업자 및 관리직 직종종사자에서 여성의 비율(국제비교)

비하여 남녀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이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3) 여성의 직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관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유의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해당 법률에 따라 상시 고용하는 노동자수(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임,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 301명 이상의 사업주는 여성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계획을 책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를 진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들은 1) 자사의 여성의 활약에 관한 상황 파악 및 과제분석 시행, 2) 상황 파악 및 과제분석을 포함한 행동계획을 책정, 제출, 공표, 3) 여성의 활약에 관해서 정보 공표를 해야 할 의무를 진다.
- 한편, 2019년 5월 29일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 성립되고 같은 해 6월 5일 공포되어 해당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취지는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자가 활약할 수 있는 취업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일반사업주행동계획 책정의무의 대상 확대, 정보공표의 강화, 파워 하라스먼트(power harassment)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고용 관리상 조치 의무 등의 신설, 성희롱 등의 방지 대책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 해당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경우, 해당 법의 성립·개정 및 실시로 인해, 보다 많은 여성이 직장생활에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 내 노력이 촉진된 점을 평가할 수 있으나, 해당 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의 여성 활약 이외에도, 여성의 정규직 진입 및 임금 격차의 문제, 또한 팬데믹 이후의 이러한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여성이 입은 실질적 생활의 타격 등 해결이 필요한 다른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일본 정부도 위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 중인 것으로 보여, 다른 정책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기대하며, 그 효과를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법령,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平成二十七年法律第六十四号)”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7AC0000000064> (접속일: 2022.4.19.)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내각부 남녀 공동 참획국) “第1節 就業をめぐる状況”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3/zentai/html/honpen/b1_s02_01.html (접속일: 2022.4.15.)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내각부 남녀 공동 참획국) “第2節 企業における女性の参画”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3/zentai/html/honpen/b1_s02_02.html (접속일: 2022.4.15.)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내각부 남녀 공동 참획국) “女性活躍推進法「見える化」サイト” https://www.gender.go.jp/policy/suishin_law/horitsu_kihon/index.html (접속일: 2022.4.15.)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내각부 남녀 공동 참획국) “今週の男女共同参画に関するデータ” https://www.gender.go.jp/research/weekly_data/index.html (접속일: 2022.4.15.)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내각부 남녀 공동 참획국) <男女共同参画白書 令和3年版>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3/zentai/html/zuhyo/zuhyo01-02-01.html (접속일: 2022.4.15.)
- 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내각부 남녀 공동 참획국) <男女共同参画白書 令和3年版> https://www.gender.go.jp/about_danjo/whitepaper/r03/zentai/html/zuhyo/zuhyo01-02-14.html (접속일: 2022.4.15.)
-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女性活躍推進法特集ページ (えるぼし認定 プラチナえるぼし認定)”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091025.html> (접속일: 2022.4.19.)
-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元年6月5日公布)の概要”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000584588.pdf> (접속일: 2022.4.19.)
-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えるぼし認定, プラチナえるぼし認定” (접속일: 2022.4.19.)
-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000594317.pdf> (접속일: 2022.4.19.)
-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도쿄 노동국 “女性活躍推進法特設ページ” https://jsite.mhlw.go.jp/tokyo-roudoukyoku/news_topics/kyoku_oshirase/_120743/jokatu.html (접속일: 2022.4.19.)
-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도쿄노동국 “【労働者数101人以上~300人以下の事業主の皆様へ】令和4年4月1日改正女性活躍推進法の義務化について <<NEW>>” https://jsite.mhlw.go.jp/tokyo-roudoukyoku/hourei_seido_tetsuzuki/kinto2/joseikatsuyaku300ika.html (접속일: 2022.4.19.)
-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아이치노동국 “行動計画策定かんたんガイド =令和4年(2022年)4月1日義務化 対応版 =” <https://jsite.mhlw.go.jp/aichi-roudoukyoku/content/contents/000968310.pdf> (접속일: 2022.4.19.)
-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아이치노동국 “【愛知労働局】女性活躍推進法に基づく行動計画策定~令和4年4月1日義務化対応~” <https://www.youtube.com/watch?v=onN-Z6TiYfQ> (접속일: 2022.4.19.)
- 毎日新聞(2021.9.28.), “縮まらぬ男女格差 議論足りなかった総裁選” <https://mainichi.jp/articles/20210928/ddm/005/070/088000c> (접속일: 2022.4.19.)
- 西日本新聞(2021.10.27.), “「女性が輝く社会」って? 雇用は増えても半数以上が「非正規の現実」” <https://www.nishinippon.co.jp/item/n/822212/> (접속일: 2022.4.19.)

일본에서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방지 노력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에서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나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5월에는 어린이날, 어머니날과 함께 “골든위크”라고 불리는 휴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오히려 가정 내 폭력의 신고 사례는 증가하였다는 자료를 상기해 볼 때,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일본에서는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혹은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도메스틱·바이올런스-앞의 용어를 가타카나로 적은 모양)’라고 부르는데, 일본 내각부 산하의 남녀공동참획국(男女共同参画局)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치된 정의는 없으나, 일본 내에서는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또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폭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다.
- 일본에도 가정폭력문제 방지를 위한 법률이 있다. 일본에서는 2001년 남편이나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배우자로부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통상 DV방지법)이 성립되었다. 이는 여성의 인권 보호와 남녀평등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참의원에 설치된 공생사회에 관한 조사회에 소속된 초당파 여성의원들에 의해 입법되었다.
- 해당 법은 배우자에 의한 폭력과 관련된 통보,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의 체제를 정비하여 배우자에 의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방지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적절한 보호를 도모할 책무, 2) 배우자 폭력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의 수행, 여성상담원에 의한 상담, 부인보호시설에서의 보호, 3) 피해자 보호(가정폭력 피해 발견자에 의한 통보, 배우자 폭력상담지원센터에 의한 보호에 대한 설명, 경찰관의 가정폭력 피해 방지 조치 강구 노력, 경찰본부장 등의 원조, 복지사무소에 의한 피해자의 자립 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연계 협력, 피해자로부터의 신고가 있을 시 적절하고 신속히 처리), 4) 보호명령 등에 대한 항목을 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에 따라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구정촌(市区町村)에 의하여 가정폭력방지 기본계획이 책정 및 공표되고 있다.
- 해당 법은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1) 자녀와 전배우자까지 보호명령 대상 확대(2004년), 2) 보호명령 확충 및 시·읍·면의 기본 계획의 책정과 가정폭력센터관련 부분 개정(2007년), 3) 배우자뿐 아니라 교제 상대방으로부터의 피해도 보호(2013년) 등과 함께, 가장 최근의 개정에서는 4)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폭력피해자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관계기관으로서 아동상담소 명문화 및 그 보호의 적용 대상으로 피해자의 동반 가족 포함까지 명시되었다(2019년).
- 그러나 2019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의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추가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구체적인 개정의 내용으로는 1) 통보·보호 명령의 대상을 「신체에 대한 폭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과 성폭력으로 확대, 2) 보호 명령의 신속한 발령을 촉진하기 위해 제14조 1항에 예시를 추가하여 무심신(無審尋) 발령 요건을 명확화, 3) 가해자 갇셈에 관한 시책의 내실화를 위해 기본방침 및 도도부현 기본계획의 기재사항으로서 「가해자 갇셈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 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한편, 최근에는 가정폭력, 성폭력피해, 빈곤 등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지원하는 새 법의 제정을 위하여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 이에 초당파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최근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困難な問題を抱える女性への支援に関する法律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이들은 해당 법의 목적으로 ‘여성 복지 증진’과 ‘인권 존중’을 명기하였다. 또한, 여성 지원을 지방자치체의 책무로 하여, 도도부현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 계획의 책정을 의무화하고, 세밀한 지원이 착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 관계기관이 지원 내용을 협의하는 회의를 설치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상담 대응과 설 자리 확보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였다. 해당 법은 4월 13일 참의원 본회에서 가결되어 중의원에 송부된 후 중의원에서 5월 19일 가결되어 성립되었다. 해당 법은 일부를 제외하고 2024년 4월 부터 시행된다.
- 일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이 수립 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정에서의 정신적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존재하며,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넘어서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 장치에도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마련되고 있는 것 은 긍정적이다.

• 참고문헌 •

- 내각부(内閣府) “「国民の祝日」について” <https://www8.cao.go.jp/chosei/shukujitsu/gaiyou.html> (접속일: 2022.5.17.).
- 내각부 남녀공동 참획국(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配偶者からの暴力に関するデータ”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e-vaw/data/01.html (접속일: 2022.5.17.).
- 내각부 남녀공동 참획국(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 (DV) とは - 暴力の形態”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e-vaw/dv/02.html (접속일: 2022.5.17.).
- 辻由希(2012) 『家族主義福祉レジームの再編とジェンダー政治』 ミネルヴァ書房.
- 내각부 남녀공동 참획국(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 (DV) とは”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e-vaw/dv/index.html (접속일: 2022.5.17.).
-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22.3.15.) “DV被害者増加 さらなるDV防止法改正を” <https://mainichi.jp/premier/politics/articles/20220313/pol/00m/010/002000c> (접속일: 2022.5.17.).
- 법령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3AC0100000031> (접속일: 2022.5.17.).
- 내각부 남녀공동 참획국(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2021.10.1.) “都道府県における配偶者暴力防止法に基づく基本計画の策定状況について”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e-vaw/law/pdf/kihon_to.pdf (접속일: 2022.5.17.).
- 내각부 남녀공동 참획국(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2021.10.1) “市区町村における配偶者暴力防止法に基づく基本計画の策定状況について”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e-vaw/law/pdf/kihon_shi.pdf (접속일: 2022.5.17.).
- 내각부 남녀공동 참획국(内閣府男女共同参画局) “配偶者暴力防止法の令和元年一部改正情報” https://www.gender.go.jp/policy/no_violence/e-vaw/law/dv0106.html (접속일: 2022.5.17.).
-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 (2021.8.5.) “【ジェンダー平等推進本部】DV被害者支援を考える(2)” https://cdp-japan.jp/news/20210727_1834 (접속일: 2022.5.17.).
-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22.4.3.) 동경조간 5면 내정면 「社説：困難抱える女性の支援 実態に即した新法実

現を」 毎索データベース에서 인용 <https://mainichi.jp/contents/edu/maisaku/login.html> (접속일: 2022.5.23.).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22.4.12.) “「売春防止」からようやく脱却 女性支援新法案 超党派で成立へ” <https://mainichi.jp/premier/politics/articles/20220409/pol/00m/010/004000c> (접속일: 2022.5.17.).

시사통신사(時事通信社) (2022.3.22.) “女性支援計画義務付け 貧困 DVで都道府県に一議員立法” <https://www.jiji.com/jc/article?k=2022032100380&g=pol> (접속일: 2022.5.17.).

일본참의원(参議院) (2022.5.19.) “議案情報 第208回国会(常会)”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208/meisai/m208100208007.htm> (접속일: 2022.5.20.).

아사히신문(朝日新聞)(2022.5.19.) “困難抱える女性の支援強化 新法成立 66年前の売春防止法から脱却” <https://www.asahi.com/articles/ASQ5M5VTDQ5MUTFL008.html> (접속일: 2022.5.20.).

일본중의원(衆議院) “議案審議経過情報”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keika/1DD58FA.htm (접속일: 2022.5.20.).

아일랜드 정부, 일·가정양립법 추진⁵⁾

-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새로운 일·가정양립법(Work Life Balance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Bill)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일·가정양립 지침(Work Life Balance Directive)에 발맞추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노동시장에서 여성 참여 확대는 이 법안의 여러 목표 중 하나이다.
- 유럽연합은 일·가정양립(EU rights to work-life balance)을 규범화하여 공표했는데, 여성은 최소 14주 출산휴가(국가별로 최소 병가 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 최소 10일 배우자 출산휴가(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 최소 4개월 육아휴가, 가족 구성원 돌봄을 위한 연간 5일의 돌봄휴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및 육아휴가에서 복귀하는 근로자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 탄력 근무, 근무 장소 선택(재택근무) 등을 포괄한다. 유럽연합 측에서는 올해 8월부터 위와 같은 사항들을 유럽연합 일·가정양립 지침(directive)에 맞춰 회원국들이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을 요구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새로운 일·가정양립법을 추진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일·가정양립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에 추진되는 새로운 일·가정양립법에 대해 로데릭 오고먼(Roderic O'Gorman) 평등정책 장관(Minister for Equality)은 근로자들의 근로 의무와 양육 또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 양립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고먼 장관은 이번 법안이 늦어도 2022년 7월 말까지는 하원 및 상원을 통과하고 8월부터 발효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본 법안 주요 조항들 중에서도 다음 세 가지에 주목할 만하다. 첫째,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보호자의 유연근무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근로시간 축소 또는 유연근로 전환을 거부할 경우 직장관계위원회(Workplace Relations Commission)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일랜드 직장관계위원회

5) 박서희,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는 2015년 설립된 독립기구로, 고용 및 근로와 관련된 법률 이행 모니터링, 갈등 중재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아일랜드 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최소 6개월 전에 유연근무를 요청해야 하고, 고용주는 4주 내로 답변해야 한다. 둘째, 5일의 무급 병가는 자녀 또는 현재 근로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돌봄을 위해 고용주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한 여성 근로자를 수유 휴식시간 확대이다. 우선 현재 아일랜드의 여성 근로자는 모성보호법(Maternity Protection Acts)에 의거하여 42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6주 유급, 16주 무급휴가이다. 또한 모성보호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자녀에게 수유할 권리가 있다. 수유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고용주는 별도의 수유 공간을 마련할 의무는 없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26주 동안 하루 1시간 수유를 하거나 모유를 유축할 수 있으며, 주어진 1시간은 20분 3회, 30분 2회와 같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 이번 정부가 상정한 법안이 만약 제정된다면 일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자녀 양육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분명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성 근로자의 수유 권리 대폭 확대이다.
- 이번 법안에서 일부는 아직 다각도의 논의를 통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후 공개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정부 측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본 법안이 담게 될 최종 세부내용과 제정 여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BreakingNews.ie (2022.4.23.) "Work Life Balance Bill has potential to be 'nightmare for employers and employees" <https://www.breakingnews.ie/ireland/work-life-balance-bill-has-potential-to-be-nightmare-for-employers-and-employees-1293845.html> (접속일: 2022.5.23.).
- European Commission "EU rights to work-life balance" https://ec.europa.eu/info/policies/justice-and-fundamental-rights/gender-equality/women-labour-market-work-life-balance/eu-rights-work-life-balance_en (접속일: 2022.5.23.).
- Independent(2022.4.21.) "Workers will be able to take case against employers who refuse reduced or flexible hours requests under new legislation" <https://www.independent.ie/irish-news/news/workers-will-be-able-to-take-case-against-employers-who-refuse-reduced-or-flexible-hours-requests-under-new-legislation-41572285.html> (접속일: 2022.5.23.).
- Irish Government "General Scheme of a Work Life Balance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Bill" <https://www.gov.ie/en/publication/1105a-general-scheme-of-a-work-life-balance-and-miscellaneous-provisions-bill-2022/> (접속일: 2022.5.23.).
- Maternity Protection (Amendment) Act 2004 (2004) <https://www.irishstatutebook.ie/eli/2004/act/28/enacted/en/pdf> (접속일: 2022.5.23.).
- RTE (2022.4.21.) "Work Life Balance Bill brought to Cabinet" <https://www.rte.ie/news/business/2022/0421/1293450-work-life-balance-bill/> (접속일: 2022.5.23.).

아일랜드, 디지털 성범죄를 EU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제정

-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는 큰 문제이며, 이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도 포함된다. 아일랜드에서도 여성과 아동의 불법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사이트에 수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큰 이슈가 되었다. 영국과 미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보호에 대해 일찍이 논의한 국가들이다. 반면, 아일랜드는 영국과 미국에 비해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을 제정했으나,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온라인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 처벌수위가 가장 강력한 나라이다. 아일랜드에서는 2020년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된 가해에 관한 법안(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s and Related Offences Act),” 일명 “코코법”이 국회의 원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아일랜드 전역에서 온라인 불법 촬영 및 불법 유포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수 만 명의 서명을 얻은 한 사건이 법 제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해당 법안의 내용과 아일랜드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불법 촬영물 삭제에 관한 정책을 살펴본다.
-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된 가해에 관한 법안”의 내용
 - 아일랜드 노동당은 오랜 시간 온라인 학대, 괴롭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와 같은 성착취물, 그리고 불법 촬영 및 유포를 형법상 처벌하는 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7년이 되어서야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2017년은 다라 퀴글리(Dara Quigely)라는 여성이 경찰이 불법으로 유포한 본인의 나체 영상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있던 해이다. 다라 퀴글리는 정신질환과 중독 증세로 인해 나체로 거리를 걷다가 경찰에 연행되었고, 해당 장면이 담긴 CCTV를 동행하던 경찰이 온라인에 불법 유포하였다. 해당 영상이 불법으로 유포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라 퀴글리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가해자를 불법 촬영물 유포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다. 이후 2020년 12월, “학대, 유해한 소통, 그리고 관련한 가해에 관한 법안(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 and Related Offences Bill 2017)”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온라인 학대와 괴롭힘으로 인해 21세의 나이에 자살한 니콜 코코 폭스 (Nicole Coco Fox)를 기리는 뜻으로, “코코법(Coco’s law)”으로도 불린다.
 - 해당 법안에서 불법 촬영물은 사람의 나체 또는 성행위 장면이 담겼거나, 인체의 사적인 부위 또는 속옷으로 해당 부위가 가려진 사진 모두를 포함한 사진 및 영상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 fake)” 영상물도 불법 촬영물로 간주한다. 불법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포한 경우에 불법 유포로 정의한다.
 - “코코법”은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가해자를 최초 유포자와 재유포자로 나누어 처벌한다. 최초 유포자는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유포한 자로 무한정의 벌금 그리고/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재유포자는 악의가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사용하거나 유포한 자를 말한다. 이들은 5천 유로(한화 약 676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의 당사자가 가해자의 전 애인일 경우,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로 간주하여 가중처벌에 처한다.

-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자 지원과,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한 정부 주도의 핫라인 운영
 - 온라인상에서 불법 촬영물을 목격했거나,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인 경우 아일랜드 정부가 주관하는 핫라인에 제보할 수 있다. 해당 핫라인은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에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담당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제보할 수 있다. 해당 핫라인은 아일랜드 정부, 법무부, 아동복지 기관,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익명의 제보자는 철저한 신변보호를 받는 동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핫라인은 신고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하는 작업도 담당한다.
 - 핫라인으로 제보가 되면, 필요한 경우 아일랜드 경찰청에서 사건 조사에 착수한다. 아일랜드 경찰서에는 부문별 보호 서비스 부서(Divisional Protective Services Unit)가 설치되어 있다. 해당 부서에는 성범죄 또는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지 않고, 적절하고 민감하게 면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가정 폭력 및 데이트 폭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위한 특별 상담 서비스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 아일랜드에서는 “코코법” 제정 이후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총 144건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이 핫라인에 접수되었다. 이들 중에서 74%의 피해자가 해당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요청된 불법 촬영물 중에서 95%를 완전히 삭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피해자들이 핫라인 제보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 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유포된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를 위한 노력 외에도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참고문헌 •

- 환경경찰뉴스 (2019.7.26.)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 제도적 대응 실태-II.영국” <https://www.ep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0> (접속일: 2022.5.15.).
- BBC News (2021.10.6.) “Dara Quigley: Irish minister apologises to family over CCTV leak” <https://www.bbc.co.uk/news/world-europe-58815489> (접속일: 2022.05.18.).
- Change.org (2020) “Make revenge porn a criminal offence in Ireland” <https://www.change.org/p/irish-justice-department-make-revenge-porn-a-criminal-offence-in-ireland> (접속일: 2022.5.15.).
- Department of Justice (2021.9.2.) “Minister Hildegard Naughton launches new campaign to combat sharing of intimate images without consent: victims can now report illegally shared images” <https://www.gov.ie/en/press-release/94e75-minister-hildegard-naughton-launches-new-campaign-to-combat-sharing-of-intimate-images-without-consent/#:~:text=Launching%20the%20campaign%2C%20Minister%20of,emotional%20and%20mental%20health%20effects.> (접속일: 2022.5.23.).
- Department of Justice (2022.4.1.) “Intimate Image Abuse” <https://www.gov.ie/en/policy-information/35bec-intimate-image-abuse/> (접속일: 2022.5.23.).
- GOV.IE (2021.2.9.) “Minister McEntee marks Safer Internet Day by commencing Coco’s Law” <https://www.gov.ie/en/press-release/706c9-minister-mcentee-marks-safer-internet-day-by-c>

- ommencing-cocos-law/# (접속일: 2022.5.18.).
- Hotline.ie (2022) "Irish national centre combatting illegal content online" <https://www.hotline.ie/home/> (접속일: 2022.5.18.).
- Houses of the Oireachtas (2020.12.28.) "Harassment, Harmful Communications and Related Offences Act 2020" <https://www.oireachtas.ie/en/bills/bill/2017/63/> (접속일: 2022.5.15.).
- Human Rights Pulse (2021.2.23.) "Criminalising Online Sexual Abuse in Ireland: A Further Step Towards Ensur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ttps://www.humanrightspulse.com/mastercontentblog/criminalising-online-sexual-abuse-in-ireland-a-further-step-towards-ensuring-the-protection-of-human-rights> (접속일: 2022.5.15.).
- IrishCentral (2020.11.20.) "More than 40k sign petition to make revenge porn a crime Ireland" <https://www.irishcentral.com/news/revenge-porn-ireland> (접속일: 2022.5.15.).
- POLITICO (2020.12.17.) "Ireland brings in tough laws on revenge porn and online bullying" <https://www.politico.eu/article/ireland-brings-in-tough-laws-on-revenge-porn-and-online-bullying/> (접속일: 2022.5.16.).
- RTE (2022.3.14.) "144 reports of intimate image sharing since September" <https://www.rte.ie/news/ireland/2022/0314/1286328-image-sharing/> (접속일: 2022.5.23.).

스페인, 포괄적인 여성 살해 데이터 수집정책 시행⁶⁾

- 스페인은 2022년 1월부터 정부가 모든 여성 살해(femicide) 사건을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데이터화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여성 살해는 성폭행, 가정폭력, 여성혐오 등 다양한 이유를 기반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행한 살해 사건을 광범위하게 지칭한다. 이렇게 정부가 직접 모든 유형의 여성 살해 사건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례는 유럽에서 최초이다.
- 스페인 정부는 2021년 말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통계 데이터 분류에서는 이전 또는 현 배우자가 가하는 폭력, 성폭력 등외에 추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해 사건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은 스페인 사법 총평의회(General Council of the Judiciary), 유럽연합 산하 유럽 성평등 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등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 과거 스페인에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경우, 사회 및 언론 일각에서는 이를 치정에서 비롯된 범죄 정도로 치부하곤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여성 대상 살해를 형법에 어긋나는 엄연한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다루기 시작하고 법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면서 점차 정부 당국 관계자, 언론인, 대중 전반의 인식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져 왔다.
- 최근 몇 년간 스페인에서는 성차별적이거나 여성혐오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여성 살해 사건이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작년 6월에는 6살 소녀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해 바다에 버려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페인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다. 이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1살 딸도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두 딸의 친모이자 본인의 전 부인에게 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스페인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6) 콕서히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교(Erasmus University Rotterdam) 초청연구원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트위터(Twitter) 계정을 통해 “두 자매의 어머니가 겪을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레네 몬테로(Irene Montero) 평등부 장관(Minister for Equality) 역시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건 같은 여성 대상 범죄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의제”라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스페인 정부는 앞으로 일단 모든 여성 대상 살해 사건을 수집하고 분석한 뒤, 세부 범주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페인의 젠더폭력위원회(Government Delegation against Gender Violence)는 여성 살해 사건을 포괄하여 모니터링하는 분과위원회(Femicide Observatory)를 운영할 예정이다. 스페인 내 지역 당국들은 데이터를 젠더폭력위원회에 제출하게 되고, 여성 살해 데이터를 모두 취합한 뒤 일정 분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사건들을 나누는 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 스페인의 이레네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이번 정책 방침에 대해 “모든 성차별적인 살해 사건 사례를 파악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향후 여성 살해 사건을 미리 방지하고 철폐하는 정책들을 고안해내고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제도는 젠더 기반 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기존 사적 관계 여부보다 남녀라는 성별 역학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다.
- 2004년, 스페인은 젠더 기반 폭력의 포괄적 예방을 위한 법(Constitutional Act 1/2004 of 28 December, on Integrated Protection Measures against Gender Violence)을 제정했다. 이 법은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해 교과과정이나 직업훈련에서 성평등 및 젠더 기반 폭력에 관한 교육, 젠더 기반 폭력 관련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안 훈련 등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스페인 형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의 일부 조항들도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여성 살해 개념을 확장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겠다는 이번 정책은 한국에서도 향후 주의하여 참고할 만하다.

• 참고문헌 •

- El Diario(2021.12.20.), “España será desde enero el primer país europeo en contabilizar oficialmente todos los feminicidios”, url: https://www.eldiario.es/sociedad/espana-sera-enero-primer-pais-europeo-contabilizar-oficialmente-feminicidios_1_8595437.html (접속일: 2022.03.22.).
- El Mundo(2017.11.07.), “Sergio Morate, condenado a 48 años por los asesinatos de Laura y Marina”, url: <https://www.elmundo.es/espana/2017/11/07/5a01dc01268e3e5d688b4608.html> (접속일: 2022.03.22.).
- The Guardian(2021.06.11.), “Discovery of girl's body prompts nationwide protests in Spain”, url: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jun/11/discovery-girl-body-prompts-nationwide-domestic-violence-protests-spain> (접속일: 2022.03.22.).
- The Guardian(2021.12.31.), “Spain says it is first in Europe to officially count all femicides”, url: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dec/31/spain-says-it-is-first-in-europe-to-officially-count-all-femicides> (접속일: 2022.03.22.).
- UN Women (2004), “Constitutional Act 1/2004 of 28 December, on Integrated Protection Measures against Gender Violence”, <https://evaw-global-database.unwomen.org/fr/countries/europe/spain/2004/constitutional-act-1-2004-of-28-december--on-integrated-protection-measures-against-gender-violence> (접속일: 2022.03.22.).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내*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729개 직업훈련 실시

- 여성가족부는 202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29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본격 운영 시작
 - 경력단절여성 등이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제약품질관리 등 직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숙련 고부가가치 훈련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뿐 아니라 지역단위로 확대, 62개 과정 운영
 - 올해부터 광역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훈련과정개발팀(연구기관, 기업, 전문기관, 지역새일센터 등)을 시범 도입하여 지역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한 훈련 직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 여성 인재 양성 정책 강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3.1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CS06IFGOjQqnJXxPcfBOJeWo.mogef10?mid=news405&bbtSn=708460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결정
 - 양육비 채무 금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기(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 [여성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족부 보도자료, 2022.03.1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CS06IFGOjQqnJXxPcfBOJeWo.mogef10?mid=news405&bbtSn=708465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이행 실적 점검 결과

- 여성가족부는 ‘12개 분야의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4년간(2018~2021년) 추진 성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 이행 실적에 따르면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18년에서 21년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은 17.5%에서 24.4%, 지자체 과장급은 15.6%에서 24.3%, 공공기관 임원은 17.9%에서 22.5%으로 각기 상승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3.1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CS06IFGOjQqnJXxPcfBOJeWo.mogef10?mid=news405&bbtSn=708465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발표
 -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전년(2,753명) 대비 5.3%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 (3,622명) 대비 6.2% 감소
 -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 대비 10.6%, 피해자는 12.9% 감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 대비 61.9%, 피해자는 79.6% 증가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3.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474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의결

-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2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
 -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 및 보급, 반복신고사건 3중보고·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스토킹 폭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군 내 성폭력실태조사 정기(연 1회) 시행, 성고충 전문 상담관 확충(47→103명)과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및 각급 학교까지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 공표도 추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3.3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CFcf3j1S+5Y4la9btCfMOLJD.mogef10?mid=news405&bbtSn=708480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과 성인 총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 2021년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27점으로 청소년(71.39점)에 비해 19.12점 낮게 나타나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청소년은 점차 상승하면서 조사 실시 이래 가장 높은 점수 기록
- 20대가 54.40점인 반면 60대 이상은 49.98점, 중학생은 73.15점인 반면 고등학생은 69.65점으로, 성인과 청소년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코로나19 확산은 이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줄이고, 외부에 대한 개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4.0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CFcf3j1S+5Y4la9btCfMOLJD.mogef10?mid=news405&bbtSn=708482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지원 수, 전년 대비 2배 증가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 발표
 - 피해자 성별은 여성 5,109명(73.5%), 남성 1,843명(26.5%)으로, 남성 피해자의 수가 전년 대비 약 2배(2020년 926명 → 2021년 1,843명) 증가하였으며 불법 촬영 협박(몸캠 피싱) 피해 신고 건수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
 -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유포였으며 유포와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유형의 64.7%(2020년 51.5%) 차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4.0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494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

-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영상증인신문 희망자는 법정에서 나가 지 않고 법정, 피고인 등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있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증계장치를 활용하여 증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4.0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00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던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고,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을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9~24세(1998.1.1.~2003.12.31. 출

생자)는 오는 5.1.(일)부터 생리용품 신청 가능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4.1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dzDZcHMFYx-HWvf-ANUOyXRc.mogef10?mid=news405&bbtSn=708508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 발간

- 여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언론 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마련하고, 한국기자협회 199개 회원사 등에 배포
 - 보도 참고 수첩은 최근 새로운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사건 취재·보도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의 사항 등을 보완하여 소책자 형태로 제작
 - 성희롱·성폭력 사건 기사의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및 법원의 판례를 보완하고, 2018년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서술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핵심 내용을 보다 압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4.1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dzDZcHMFYx-HWvf-ANUOyXRc.mogef10?mid=news405&bbtSn=708510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전국 4,490가구(만 15세 이상 가구원 8,726명 중 8,358명 응답, 응답률 95.8%)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완화됐으나 여성이 가사·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 남녀 모두 ‘여성폭력이 심각하다’에 동의 비율 높아, 청년층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성차별 등 문제 심각성에 공감
 -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분배, 모두를 위한 사회적 돌봄 책임 강화,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이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4.1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dzDZcHMFYx-HWvf-ANUOyXRc.mogef10?mid=news405&bbtSn=708519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실시

- 여성가족부는 5개 중앙행정기관과 11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총 1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실시
 -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기초·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계획 수립 자문 등을 지원하며 2022년 2월부터 전체 기초 지자체 및 양성평등 전담부서 운영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참여 설명회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총 121개의 참여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업 규모 크게 확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4.2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dzDZcHMfYx-HWvf-ANUOyXRc.mogef10?mid=news405&bbtSn=70852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스톱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톱킹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
 - 스톱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4.2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26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신규 지정

-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
 - 지정된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성평등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며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진단과 인증 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서비스(컨설팅) 등 추가 지원 혜택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5.0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47

새일센터, 2021년 전국 158개소에서 64만명 서비스 이용

-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13년 만에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살피고, 향후 과제 모색
 - 2021년에 취업지원서비스(상담·일경험·직업훈련 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예방(직장 적응·경력개발·사후관리 등)까지 지원하는 새일센터에 64만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 중 18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형 취업지원 등으로 경력단절여성 규모(2014년 216만 명 → 2021년 144만 명) 및 비율(2014년 22.2% → 2021년 17.4%)이 줄어들었으며, 이와 함께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 완화(2013년 66만 원 → 2019년 35.6만 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5.0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51

2021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국가승인통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2021년)」 결과 발표
 - 2021년 가족친화지수는 46.9점으로 2018년보다 6.3점 상승하였고, 부문별 지수는 공공부문(55.7점)이 민간부문(41.1점)보다 14.6점 높았음.
 - 영역별 가족친화지수는 근로자지원제도를 제외한 영역에서 3년 전보다 상승하였고, 타 영역에 비해 가족친화문화조성(69.0점) 및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58.0점) 영역의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가족돌봄휴직 등이 활용됨에 따라 탄력근무제도(11.8점 ↑), 부양가족지원제도(18.3점 ↑) 영역 지수가 크게 상승
 - 가족친화제도 시행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근로자 직장만족도 향상(59.7%)', 근로자 생산성 향상(51.5%)', '근무태도 향상(50.9%)', '기업 생산성 향상 50.4%'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5.22.]

·참고문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62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월평균소득은 약 245.3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416.9만 원) 대비 절반 수준이었고, 취업 중인 한부모는 77.7%이며, 상용근로자 비율은 49.2%로 낮은 수준
 - 자녀 양육은 '양육비·교육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응답이 70% 이상(미취학 자녀 72.1%, 초등 자녀 71.9%, 중학생 이상 77.7%)이었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는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이행관리원 역할 강화'(23.6%) 순으로 나타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5.22.]

·참고문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0SXneOVOfSd9qjRJogJFxE3.mogef20?mid=news405&bbtSn=708567

2022년 청년 양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 4기') 참가자 모집

- 여성가족부는 2022년 청년 양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Butter knife crew) 4기 모집
 - 버터나이프 크루 4기는 특별 분야인 '젠더갈등 완화', '공정한 청년 일자리 환경 조성', '청년 고립, 우울감 극복을 위한 마음돌봄'과 일반 분야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주제로 총 15개의 프로젝트팀(100명) 내외로 구성
 - 올해 만들어진 '젠더갈등 완화' 특별 분야는 양성평등 인식 격차 및 차별·혐오 해소를 위한 사실 확인(팩트체크) 프로젝트, 청소년(청년) 교육, 청년층의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소통 기회 마련 등 추진 예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5.23.]

·참고문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68

2022 「청소년 통계」 발표

-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2022 「청소년 통계」 작성
 - 2021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전년 대비 2.0%p 증가한 44.2%, 실업률은 1.2%p 감소한 7.8%로 나타났고, 초(4~6)·중·고등학생의 96.8%가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5.2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7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시행

-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6월 8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힘
 - 여성경제활동법은 정책 대상과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 달리,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고려해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 추가
 -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와의 공동업무 강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5.3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78

성매매 위험 노출된 아동·청소년 727명 보호·지원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총 727명(장애인 47명 포함)에게 12,520건의 지원 서비스 제공
 - 피해자 연령은 14~16세가 293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입 경로는 채팅앱이 338명(46.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6.03.]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81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770개) 및 민간사업체(1,7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2018년 8.1%에 비해 3.3% 감소했으며, 여성(7.9%)의 피해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6.0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83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22년 4월 25일(월)까지 입법예고
 -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센터장을 겸직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를 추가하여 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3.15.]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612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는 효과적 보육정책 시행을 위해 3년마다 실시되는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가구가 직접 부담하는 어린이집 이용 비용은 월평균 5.6만원으로 나타났고,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비율은 29.6%로, 2018년 대비 17.4% 증가했으며 양육 중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어머니 단독 32.6%, 아버지 단독 2.1%, 부모 모두 이용 2.4%으로, 2018년 대비 각각 25%, 91%, 167% 증가
 - 양육 중 겪는 애로사항으로 이른 출근 시간·늦은 퇴근 시 돌봄이 1위, 예측 곤란한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이 2위로 꼽혔으며 가구 양육비는 월평균 97.6만 원,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19.3%로 나타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4.28.]

• 참고문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71285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공표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누리집에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에 불응한 41개 사업장 명단 공표
 -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개소 증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5.30]

• 참고문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7163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예외규정 명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5.31]

• 참고문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NT_SEQ=371648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그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그간 제외되었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가됨에 따라, 모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을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 신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06.07.]

• 참고문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NT_SEQ=371705

[법무부]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 권고안 발표
 - 위원회는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분노·비현실감·죄책감·무기력·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하며 가해 행위 중심의 성 중립적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 제안
 - 다수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아 부적절하므로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법무부 보도자료, 2022.03.24.]

• 참고문헌 •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U3NTY5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IM0QI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IM0QIMjZpc1ZpZXdNaW5lJTNEZmFsc2UIMjZwYWdlJTNEZm5yNmJic09wZW5XcmRTZXEIM0QIMjZzcmNoQ29sdW1uJTNEJTl2c3JjaFdyZCUzRCUyNg%3D%3D>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중소기업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고,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여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을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2.04.12.]

• 참고문헌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ldx=86&bcldx=1033001&parentSeq=1033001>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처음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 시·군 선정
-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검진 비용의 90%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04.26.]

• 참고문헌 •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IMkY2OCUyRjMzMDExMSUyRmFydGNsVmllZy5kbyUzR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IM0QIMjZiYnNPcGVuV3JkU2VxJTNEJTl2cmdzQmduZGVtdHlIM0QIMjZwYXNzd29yZCUzRCUyNnNyY2hDb2x1bW4IM0QIMjZyb3clM0QxMCUyNmIzVmllZD01pbmUIM0RmYWxzZSUyNnBhZ2UIM0QyJTl2c3JjaFdyZCUzRCUyNg%3D%3D>